

다문화가정 부모교육의 방향성 논의 -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중심으로 -

김경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에서 나타나는 양성평등 인식 부족이 부부 갈등, 의사소통 단절, 가정 내 인권침해로 확대되는 구조적 맥락을 문헌 및 정책 자료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방향성을 이론적으로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문헌·정책 분석 기반 이론연구로서, 2015년 이후 국내 선행연구와 정부·공공기관의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및 정책 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다문화가정 부모교육은 언어·적응 중심 접근에 편중되어 있으며, 가정 내 성 불평등 구조와 권력 관계를 재구성하는 교육적 개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부모교육이 성역할 재인식과 성인지감수성, 인권의식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양성평등 중심 교육으로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주제어 : 다문화가정, 양성평등 인식, 성인지감수성, 인권의식, 부모교육

논문 투고일 : 2025. 12. 17. 최종심사일 : 2025. 12. 22. 게재확정일 : 2025. 12. 27.

*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Kim, Kyoung Mi, 746-10, Namcheon-ro, Gyeongsan-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38695, Email: furemy@naver.com

I. 서론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은 더 이상 일시적이거나 예외적인 가족 형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구조적 가족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문화가정을 단순한 ‘적응의 대상’이 아니라, 가족 내부의 관계 구조와 역할 인식을 재검토해야 할 사회적·교육적 과제로 인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다문화가정은 가족 형태의 다양화, 생애주기의 변화, 구성원의 국적·문화적 배경 차이 등으로 인해 기존의 획일적인 가족 정책이나 교육 접근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거나 지원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한편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정책적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 가족 내 갈등, 인권침해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은 언어 장벽, 경제적 의존, 체류자격의 배우자 종속 구조 등으로 인해 가정 내 권력 불균형 상황에 놓이기 쉬우며, 이는 부부 간 의사소통 단절과 갈등 심화, 나아가 가정폭력 노출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문화 차이나 개인의 적응 실패가 아니라, 성역할 인식과 권력 관계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와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은 심리·정서적 학대뿐 아니라 신체적·성적 폭력, 경제적 통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도적 보호를 받는 과정은 내국인 여성에 비해 훨씬 제한적이다. 체류자격이 배우자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구조적 특성은 폭력 신고를 더욱 어렵게 만들며, 이로 인해 가정폭력과 인권침해는 은폐되거나 장기화될 위험이 크다. 이러한 현실은 법적·사후적 보호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다문화가정 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관계 형성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단순한 법적 제재나 제도적 보호를 넘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식과 관계 구조를 변화시키는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가정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동등한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기보다 기존 가족문화 속 서열과 위계에 따라 종속적인 위치에 놓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러한 인식은 사회적 고립과 차별, 폭력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개인의 문화 적응 문제가 아니라, 가족 내 성역할 인식과 권력 구조를 재구성해야 할 교육적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중심으로 한 부모교육은 다문화가정이 직면한 문제를 예방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교육 전략으로 주목될 필요가 있다. 양성평등 교육은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적 역할로 고정하지 않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등한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인식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 구성원 간 관계를 수직적·위계적 구조에서 수평적·협력적 구조로 전환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부모교육의 방향성을 양성평등 인식 개선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설문이나 실험을 통한 경험적 연구가 아닌, 문헌·정책 분석에 기반한 이론연구로서 다문화가정 관련 선행연구와 정부 통계자료, 정책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범위는 주로 2015년 이후 국내 연구와 정책 자료로 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다문화가정 부모교육의 한계를 검토하고, 향후 부모교육이 성평등·인권·문화수용성을 핵심으로 하는 관계 중심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다문화가정 부모대상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1. 다문화가정 현황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은 최근 10여 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한국 사회의 주요 가족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통계청의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 가구원 수는 2018년 약 100만 명 수준에서 2023년에는 약 12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24). 이러한 변화는 다문화가정이 더 이상 일시적 현상이나 특정 집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사회 구조 변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제결혼 역시 다문화가정 형성의 중요한 경로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국제결혼 건수는 2006년 38,759건으로 전체 혼인 대비 11.7%에 이르렀으며,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완만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2024년 국제결혼 건수는 21,45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체 혼인 건수 대비 약 9~10% 수준에 해당한다(통계청, 2024). 이는 다문화가정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과도기적 현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혼인·가

족 구조 변화와 밀접하게 연동된 지속적 흐름임을 보여준다.

한편 다문화가정 내부의 가구 유형 역시 점차 다변화되고 있다. 여성가족부(2023)는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결혼이민자가 본국으로 귀환한 이후 한국 국적의 자녀만 남겨지는 가구 형태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결혼이주여성 - 부부 중심' 정책 접근이 다문화가정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정책적·교육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한다.이에 정부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생활 기반 조성 및 사회통합을 목표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 왔다. 여성가족부(2023)는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생애주기별 지원과 가족 기능 강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내 관계 갈등, 성 불평등 인식, 인권침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종합하면, 다문화가정은 양적 확대와 더불어 가족 구조의 복잡화라는 질적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적응 중심 지원이나 단기적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가족 내 성역할 인식과 권력 관계가 고착화될 경우 갈등과 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현황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통계 제시를 넘어 부모교육의 방향성과 내용 재구조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 중심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표 1> 시도/시군구별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시군구별	2023			
	남편-전체혼인건수	한국인 남편 + 외국인아내	아내-전체혼인건수	한국인 아내 + 외국인남편
전국	193,657	14,710	193,657	5,007
서울특별시	36,324	2,420	37,374	1,270
부산광역시	10,303	619	10,451	250
대구광역시	8,150	509	8,125	169
인천광역시	11,621	878	11,253	309
광주광역시	5,169	365	5,154	98
대전광역시	5,212	364	5,295	88
울산광역시	4,274	315	3,953	67
세종특별자치시	1,705	77	1,520	31
경기도	54,221	4,217	50,736	1,550
강원특별자치도	5,494	463	4,854	83
충청북도	6,212	562	5,562	111

충청남도	8,264	844	7,086	190
전라북도	5,483	536	5,175	135
전라남도	6,157	654	5,449	104
경상북도	8,128	745	7,359	193
경상남도	10,232	826	9,447	257
제주특별자치도	2,614	294	2,380	56
국외	4,094	22	12,484	46

출처 : 통계청

이상의 통계는 다문화가정이 더 이상 예외적 가족 형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가족 유형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다문화가정 지원이 단순한 초기 적응이나 기능적 지원을 넘어, 가정 내부의 관계 구조와 인식 체계를 다루는 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가족 내 성역할 인식과 권력 관계를 재구성하는 양성평등 중심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과 인권침해

다문화가정은 이미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여전히 사회적 약자로서 이중적인 소외를 경험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외국인이라는 지위, 언어적 장벽, 사회적 관계망의 제한 등으로 인해 폭력 상황에 처했을 때 일반 가정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된다. 국내 친·인척의 부재,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지지 네트워크의 부족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 자체를 협소하게 만들며, 이는 곧 폭력의 은폐와 장기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다문화가정 폭력 피해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112 신고 시 3자 통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적 지원 창구인 ‘다누리 콜센터’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결혼 이민자 비율이 6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상당수의 결혼이주여성이 실질적인 보호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보 격차는 폭력 피해 상황에서 즉각적인 신고와 개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다문화가정이 제도 밖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결혼이주여성 9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이주 여성 체류 실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조사에 응답한 결혼이주여성 가운데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폭력의 양상 또한 단일한 형태에 그치지 않고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응답자 중 81.1%는 반복적인 욕설과 모욕 등 심각한 언어·정서적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고, 224명은 폭행이나 흉기 위협 등 신체적 폭력을, 263명은 성행위 강요나 강간과 같은 성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가정폭력이 일시적 갈등이 아니라,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 중첩된 형태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 피해 이후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같은 조사에서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결혼이주여성 중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사례는 140명으로, 실제로 도움을 요청한 사례(119명)보다 더 많았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등의 응답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제도적 보호체계에 대한 신뢰와 정보 모두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폭력 피해가 개인 내부에 머무르며 장기화되고, 결과적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로 확대될 가능성을 높인다.

한편 여성가족부(2022)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가구원 수는 2019년 기준 10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에 이르며, 다문화 출생아 수 또한 17,939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9%를 차지하는 등 다문화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다문화가족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편견은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적 요소는 다문화가정 내 불평등 관계를 강화하는 출발점으로 지적된다.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광고는 여성의 외모, 신체 조건, 순종성 등을 강조하며 성을 상품화하거나 특정 인종을 대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결혼이주여성을 동등한 배우자가 아닌 종속적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구조를 재생산해 왔다. 이에 정부는 국제결혼중개 광고물에 얼굴, 키, 몸무게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행위를 거짓·과장 광고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다문화 사회 이해, 성인지 감수성, 인권보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불법적인 온라인 광고와 영상일기(브이로그) 형태의 영상 광고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연계한 온라인 광고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였다(여성가족부, 2020).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사후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과 인권침해 문

제는 여전히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는 법과 제도의 정비만으로는 가정 내부에서 작동하는 성별 권력 관계와 인식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인권침해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해 이후의 보호를 넘어 사전 예방 차원의 양성평등 인식 개선과 가족 관계 재구조화를 목표로 한 부모교육의 강화가 필수적인 과제로 제기된다.

<표 2> 가정폭력 경험유무 현황

변수		사례수(명)	백분율(%)
심리언어적 학대	심한 욕설	314	81.1
	부모님과 모국 모욕	102	26.4
신체적 학대	폭력 위협	147	38.0
	흥기 위협	77	19.9
성적 학대	성행위 강요	108	27.9
	성적 수치심	95	24.5
	성추행, 강간	60	15.5
건강상 불이익	낙태 강요	46	11.9
	치료 방해	77	19.9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	160	41.3
활동자유 구속	감금	46	11.9
	외출 방해	99	25.6
	신분증 갈취	64	16.5
	한국어 교육 방해	69	17.8
고국과의 단절강요	본국 식구와 단절	66	17.1
	본국 방문 방해	104	26.9
	본국 송금 방해	104	26.9
경제적 학대	금전적 방해	129	33.3
	수입 갈취	60	15.5
	과도한 휴대폰 요금	63	16.3
	과도한 집안일	106	27.4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이러한 분석은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과 인권침해 문제가 사후적 보호나 법적 개입만으로는 충분히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폭력과 인권침해의 근저에는 체류자격 종속 구조, 성별 권력 불균형, 위계적 성역할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개별 사건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구조적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정책적 대응은 주로 폭력 발생 이후의 보호, 상담, 법적 조치에 초점을 두어 왔으나, 이러한 사후 대응은 이미 형성된 가정 내 권력 관계와 성역할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과 인권침해는 ‘발생 이후

에 개입해야 할 문제'이기 이전에, 가족 관계 형성 과정에서 누적되는 성 불평등 인식과 의사소통 구조의 결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접근은 사후적 보호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차원의 교육적 개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 교육은 부부 관계와 가족 상호작용의 핵심 주체를 대상으로 하여 성역할 인식, 권력 관계, 의사소통 방식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즉, 다문화가정 부모교육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적응 지원을 넘어, 성평등 인식과 인권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관계 형성 교육으로 재설계되어야 하며, 이는 가정폭력과 인권침해를 '사후에 개입하는 문제'가 아닌 '사전에 예방 가능한 문제'로 전환시키는 핵심 전략이라 할 수 있다.

3. 다문화가정 부모대상 교육 현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과 인권침해 문제는 사후적 보호와 법적 개입만으로는 충분히 예방·해결되기 어려우며, 가족 관계 형성 과정 전반에 개입하는 사전 예방적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부모교육은 부부 관계와 가족 상호작용의 핵심 주체를 대상으로 하여 성역할 인식, 의사소통 방식, 권력 관계를 재구조화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적 수단으로 주목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부모대상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의 현황을 검토하고, 이러한 교육이 가정폭력과 인권침해의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어떠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후 절에서 제시될 양성평등 중심 부모교육 강화 방향의 논의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1) 다문화가정 부모대상 교육 선행연구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부모대상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탄력적 부모 되기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김연수, 2008),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경험 연구(강기정, 2009),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강기정, 이운주, 2010; 서지영, 2019; 이정숙, 2015; 이은경, 2013; 한경님, 2012) 등이 있으며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국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관련한 연구(김정원, 남규, 2009)와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요구도 조사 연구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기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의 부모-자녀 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효과성 연구(민성혜, 김경은, 김리진, 2011; 남정아, 양명숙, 2013),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영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부모 역할 프로그램 연구(강현옥, 황혜원, 2013), 어머니의 언어행동과 아동의 표현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컴퓨터 보조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구(김영란, 이병인, 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그 자녀의 언어 능력과 어머니-유아 간 언어적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 연구(현은애, 나종혜, 2012), 자녀 양육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한서연, 2012), 자녀능력 향상 특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박선옥, 김하림, 최수현, 2010),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지 및 사회,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서수미, 박혜원, 2016) 등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양육능력 강화, 언어·문화 적응, 부모-자녀 관계 증진을 목표로 했으나, 가정 내 양성평등 의식, 문화다양성 이해, 인권 감수성 교육 등과 같은 보다 구조적·관계적 요소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2) 다문화가정 대상 프로그램 실시 현황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크게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보육료지원, 이주배경청소년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지자체다문화가정지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를 지원하는 것으로 다문화 가정에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지원하며 부모교육은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라 부모,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은 전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이 다문화·탈북학생 멘티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습, 진로상담 및

문화교류 활동 등의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이며,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는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보육료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은 이주배경(북한 이탈·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문화 통합을 위해 체계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 통합적·단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며,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지원,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개인 및 가족상담을 지원한다.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내용들은 대동소이하며 대부분 한국어 교육 및 지원과 자녀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내용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함께 공존하는데 있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인권교육, 반편견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은 그 시행이 미비하며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주대상자의 자국 문화를 소개하고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여성가족부(2022)에 따르면, 방문교육 서비스는 부모교육·한국어교육·자녀생활지도 등을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어 교육 비중이 가장 높고, 관계·갈등관리·권리교육 등 핵심 정서·관계 영역은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다문화가정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석 연구(이효정 외, 2020)에서도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기초 한국어·학습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권·성평등·부부관계 개선·문화다양성 교육은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평가 보고서(여성가족부, 2021)에서도 센터 프로그램의 60% 이상이 “적응을 위한 기초지원(한국어·양육·문화 이해)”에 집중되어 있으며,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상호문화적 조정(Mutual Cultural Adjustment) 교육은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2017)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 중 차별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로 나타난 것처럼 가정 내·외 차별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게 큰 스트레스요인이라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의 주축이 되는 가정에서는 이러한 차별과 평등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다문화가정 대상 프로그램은 초기 정착과 기능적 적응을 지원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가정 내 성 불평등, 차별 경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예방·완화하기 위한 부모교육에는 구조적 공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기존의 언어·양육 중심 접근을 넘어, 양성평등 인식 개선과 인권 감수성 함양을 핵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프로그램 운영 현황 분석을 종합하면, 현재의 다문화가정 부모대상 교육은 언어 습득과 초기 적응, 자녀 양육 지원이라는 기능적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가정 내 성 불평등 구조와 인권 침해 가능성을 예방·완화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부모교육의 주요 대상이 결혼이주여성에게 편중되어 있고, 부부 공동 참여를 전제로 한 관계 재구조화 교육이나 성인지·인권 중심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다문화가정 부모교육이 기존의 적응 중심·지원 중심 접근을 넘어, 성평등 인식과 인권 감수성, 문화수용성을 핵심으로 하는 관계 중심 교육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부모교육이 양성평등 관점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강화·재구조화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4. 다문화가정 부모대상 교육 문제점

1) 다문화가정 내 문화적 차이 이해 부재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가족관, 관습, 문화, 전통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관계 형성을 위한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정생활에서는 상호문화적 조율보다는 한국의 관습과 생활방식을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편을 중심으로 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러한 요구가 높은 비율로 확인되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한 부계중심적 가족관과 가부장적 질서가 다문화가정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문화가정 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은 단순한 문화 차이 자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형성된 가치관과 성역할 인식, 가족관에 대한 이해 부족이 권력 관계의 비대칭 속에서 표출된다는 점에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은 다문화가정 갈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한국 사회의 부계중심 가족문화, 고정된 성역할 기대, 그리고 한국식 생활방식의 일방적 강요를 지적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문화적 차이를 ‘조정해야 할 차이’가 아닌 ‘조정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남편이 아내에게 한국의 관습과 규범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다문화가정에서 문화적 공존이나 상호적 적응(integration)이 아닌 동화(assimilation)를 전제로 한 가족 운영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정기선과 김혜영(2018)의 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에게 요구되는 문화 적응이 상호적 조율의 과정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규범에 대한 일방적 수용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결혼이주 여성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표현할 기회를 제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일방적 동화 요구는 가정 내 평등한 의사소통 기반을 약화시키고, 갈등을 일시적 조정의 대상이 아닌 만성적·구조적 문제로 고착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문화 차이에 대한 협상과 상호 이해가 배제될수록, 부부 간 갈등은 성별 위계와 결합하여 권력 관계의 문제로 전환되며, 이는 결혼이주 여성의 심리적 위축과 가족 내 발언권 약화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가족 역동은 갈등의 반복과 심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가정폭력과 인권 침해로 확장될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에서의 부부 갈등과 인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결혼이주 여성의 '적응'을 강조하는 접근을 넘어, 부부와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상호문화 이해와 양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 다문화가정 부부 의사 교류 부족

다문화가정 부부는 단순한 언어 장벽을 넘어, 상호 신뢰 형성의 어려움, 감정적·인지적 소통의 제한, 그리고 성별·문화적 권력 불균형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일상적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장애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 전반에 걸쳐 불평등한 상호작용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김영란과 이병인(2012)은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 문제를 언어 장벽, 문화적 오해, 권력관계의 불균형이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면서, 의사소통의 부족이 갈등을 반복·고착화시키고 결혼이주 여성의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위축을 심화시킨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개인의 성격 차이나 일시적 문제라기보다, 구조적 소통 결핍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최근 조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의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상호 협의와 조정에 기반하기보다는 남편 또는 시가(媿家) 중심의 일방적 지시·통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는 결혼이주 여성의 의견 표명과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가정 내 의사소통을 수평적 상호작용이 아닌 위계적 전달 체계로 전락시키

는 결과를 초래한다. 의사소통의 결핍은 가정 갈등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정서적 문제로까지 확장된다. 반복적인 소통 실패와 의사결정 배제는 결혼이주여성에게 고립감, 만성적 스트레스, 우울감 등을 유발하며, 이는 자존감 저하와 문제 해결 회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이러한 정서적 위축은 가정폭력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의사소통 부족은 폭력 발생 이후의 대응 능력까지 약화시키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 교육이나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은 현재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주로 단기적 정보 제공이나 적응 중심 교육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부부 간 상호 이해 증진과 권력 관계 재조정을 목표로 하는 심층적 교육 개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가족 관계 형성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언어 교육을 넘어 의사소통 역량 강화와 양성평등 기반의 부부관계 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요구된다.

3) 다문화가정 확대에 따른 문화다양성 인식 부재

다문화가정이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심규선(2018)은 다문화 사회통합의 핵심 요인으로 상호 접촉과 신뢰의 형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사회가 여전히 단일 민족·단일 문화 중심의 가치관에 강하게 기반하고 있어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다문화가정을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아닌 ‘적응해야 할 타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구조적 토대로 작용한다. 국제 비교 연구에서도 한국 사회의 문화다양성 수용 수준은 낮은 편에 속한다. OECD 사회통합 보고서(2020)에 따르면, 한국은 이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신뢰 수준과 일상적 접촉 빈도에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 역시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통합을 뒷받침하는 인식과 태도 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화다양성 인식의 부족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환경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가정 및 사회 적응 전반에도 심각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김미숙(2020)은 다문화가정 부모가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 인식이 가족 내 상호작용

의 위축과 양육 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곧 가족 기능 약화로 연결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부모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수록 자녀의 학교 적응 문제와 정서적 불안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은 또한 사회적 차별 경험이 가족 내부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기선·김혜영(2018)은 다문화가정이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주변화될수록, 가족 내부에서는 갈등 조정 능력이 약화되고 부부 간 상호 이해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외부 환경에서의 배제 경험이 가정 내부로 전이되어, 부부 관계와 부모-자녀 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중 부담 구조’를 형성함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Banks(2016)의 다문화 시민성 이론에 따르면,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소수 집단 가정이 지속적인 정체성 혼란과 소속감 결핍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가족 구성원 간 상호 이해와 신뢰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사회의 낮은 문화다양성 수용성은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개인이나 가족 차원의 적응 실패로 환원시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결국 문화다양성 인식의 부재는 단순한 사회적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다문화가정 부모의 사회적 고립, 자녀의 학교 부적응, 부부 간 상호 이해 부족 등 다양한 가족 기능 약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 가정의 적응을 강조하는 접근을 넘어,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과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운영상의 미비가 아니라, 다문화가정 부모교육이 양성평등과 인권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Ⅲ. 다문화가정 부모대상 양성평등 교육 강화방향

1. 문화수용성 지향

다문화가정 내 갈등과 성 불평등 문제는 단순한 문화 차이에서 비롯되기보다는, 특정 문화와 생활방식을 우위에 두고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동화 중심적 가족 운영 방식에서 심화

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의 생활방식과 성역할 규범을 우선적으로 따를 것을 요구하는 구조는, 부부 간 상호 이해와 협의에 기반한 문화 교류가 아니라 편향적 적용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구조는 부부 갈등과 권력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다문화가정 내 평등한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다문화가정 부모교육이 단순한 한국문화 전달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문화수용성을 핵심 가치로 재설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문화수용성은 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우월하게 판단하는 태도를 넘어, 문화 간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즉, 문화적 차이는 극복해야 할 장애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재구성해 나가야 할 자원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부모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첫째, 상호 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 부모교육이 요구된다. 이는 한국문화만을 전달하는 일방적 교육에서 벗어나, 한국 배우자 또한 상대 문화의 가치와 관습, 성역할 인식을 학습하는 양방향 교육 구조를 의미한다. 둘째, 문화 갈등을 ‘문제’가 아니라 ‘조정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문화의 다양성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가족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관점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실생활 기반의 문화조정 전략이 제공되어야 한다. 자녀 양육 방식의 차이, 경제·가사 역할 분담, 확대가족과의 관계 조정 등 일상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중심으로 적용 가능한 교육 내용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문화수용성을 지향하는 부모교육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함께 협의하고 재구성해야 할 가족의 자원’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교육 과정에서는 부부가 각자의 성장 배경과 문화적 관습을 공유하고, 자녀 양육과 가사 분담, 확대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화 차이를 사례 중심 토의 방식으로 조정해보는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2. 양성평등을 위한 성인지감수성 함양 강화

다문화가정 내 성 불평등은 국적이나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역할 고정관념, 가사·돌봄 노동의 불균형, 의사결정 과정의 비대칭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가정 내 의사결정이 특정 성이나 배우자에게 집중될수록 부부 갈등이 심화되고, 결혼이주여성의 정서적 스트레스와 관계 만족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

진다. 이러한 특성은 부모교육이 단순한 양육 기술 습득이나 생활 적응 중심 교육을 넘어, 성인지감수성을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성인지감수성 함양을 위한 부모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강화될 수 있다. 첫째, 부부 간 의사결정의 평등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가족 내 주요 결정 과정에서 부부가 동등한 주체로 참여하고 협의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위계적 관계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 둘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교육이 요구된다. 가사와 돌봄, 경제활동이 특정 성의 역할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젠더 기반 폭력 예방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 불평등 구조가 심화될수록 언어적·정서적 폭력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관계 폭력의 경계와 예방을 다루는 교육이 구조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정 부모교육이 결혼이주여성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오히려 성 불평등 책임을 이주여성에게 전가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다문화가정의 양성평등 교육은 단순한 권리 정보 제공이 아니라, 부부 모두가 젠더 관점에서 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심층적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교육은 부부 공동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일상 속 의사결정과 가사·돌봄 상황을 주제로 한 역할극이나 사례 분석을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성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3. 인권의식 함양 강화

인권의식은 다문화가정에서 문화수용성과 양성평등을 연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인권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타문화에 대한 포용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강화되며, 이는 가족 관계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 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이 사회적·언어적 취약성을 지닌 경우가 많은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권과 평등, 차별 금지에 대한 교육은 부모교육의 핵심 요소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부모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다. 첫째, 가정 내에서 동등한 존엄의 가치가 확립되어야 한다. 국적, 언어,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일한 인간적 존엄을 지닌 존재임을 부모교육을 통해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강화하는 교육이 요구된다. 결혼이주여성의 언어 능력이나 문화적 차이

를 이유로 발생하는 미세한 차별과 무의식적 편견을 인식하고 이를 교정하는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인권의식은 자녀의 인권·다문화 감수성 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 부모의 인권 존중 태도는 자녀의 학교 적응과 또래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정 내 인권 친화적 문화는 자녀의 인권의식 형성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 넷째, 권리 기반 접근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부모교육을 복지적 지원 차원이 아닌 권리 보장 중심 접근으로 재정의함으로써, 부모가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인권의식은 단순한 태도 차원의 요소가 아니라 다문화가정 관계의 질과 문화수용성, 양성평등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다. 따라서 부모교육에서는 가정 내 언어 사용, 이동의 자유, 의사 표현 등 일상적 상황을 중심으로 인권 침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가족 구성원 간 상호 존중의 원칙을 합의하는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가정 전체의 인권 기반 문화를 형성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부모교육의 내용과 한계를 양성평등 인식 개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부모교육의 방향성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현재 다문화가정 부모교육은 일정 수준의 초기 정착과 기능적 지원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가정 내 관계의 질과 성평등, 인권 보호 측면에서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다문화가정 부모교육은 여전히 적응과 기능 중심의 접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모교육은 한국어 교육, 자녀 학습 지원, 생활 적응 지도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부부 관계 개선이나 성평등 인식, 가정 내 권력 관계 조정과 같은 구조적·관계적 요소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부모의 단기적 적응에는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으나, 가정 내 갈등 예방이나 장기적인 관계 안정에는 한계를 지닌다.

둘째, 다문화가정 내 성 불평등과 가정폭력 문제는 여전히 구조적 문제로 지속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폭력은 단순한 문화 차이에서 비롯되기보다는, 성역할 고정관념, 의사결정의 비대칭성, 경제적·사회적 권력 불균형과 같은 구조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심리적·정서적 폭력이 일상화되거나 신체적 폭력과 결합되는 양상은, 사후적 개입만으로는 문제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인식 변화 중심의 접근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셋째,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은 다문화가정 부모교육에서 여전히 주변적 위치에 머물러 있다. 현재 운영되는 다수의 프로그램은 성인지각수성, 인권, 차별 예방을 명시적 목표로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이 포함되더라도 단편적·일회적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모교육이 결혼이주여성에게만 적용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가정 내 성 불평등 구조를 오히려 고착화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교육 대상과 내용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넷째, 문화다양성에 대한 제한적 이해는 다문화가정의 부부 갈등과 가족 기능 약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갈등은 문화 차이 그 자체보다, 문화 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방적 동화 요구와 위계적 관계에서 심화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문화이해 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타문화 소개를 넘어, 관계 재구성과 상호 협의를 중심으로 한 교육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다문화가정 부모교육은 기존의 적응 중심 패러다임을 재검토하고, 관계의 질과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한 접근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개인의 적응 역량 부족으로 환원하는 방식은 구조적 불평등과 권력 관계를 간과할 위험이 있으며, 양성평등 인식 개선은 부모교육의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핵심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갈등을 문화 문제가 아닌 젠더 구조와 관계의 문제로 재해석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인권의식은 양성평등과 문화수용성을 연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부모의 인권 존중 태도는 가정 내 관계 안정뿐 아니라 자녀의 사회적 적응과 또래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인권 교육은 부모교육에서 선택적 내용이 아니라, 가정 전체의 관계 문화를 형성하는 핵심 축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 배우자를 배제한 부모교육 구조는 가정 내 권력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한계를 지니므로, 부부 공동 참여를 전제로 한 교육 구조가 요구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실천적·연구적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다문화가정 부모교육의 목표를 ‘적용 지원’에서 ‘권리 기반 관계 형성’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부모교육은 한국 사회의 규범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부부가 동등한 주체로서 관계를 협의·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양성평등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다문화가정 부모교육의 필수 핵심 영역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단발성 교육이 아닌 체계적·단계적 교육과정으로 구성하고, 부부 공동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운영 방식이 요구된다.

셋째, 인권 기반 부모교육 모델의 개발과 확산이 필요하다. 인권 교육은 차별 예방을 넘어, 가정 내 존엄과 평등의 문화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므로, 양성평등·문화다양성과 통합된 교육 모형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방문교육서비스의 기능을 관계·권리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과 인권 교육 운영 여부를 서비스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 양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향후 연구에서는 부모교육의 실제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양성평등·인권 중심 부모교육이 부부 관계, 가정폭력 예방, 자녀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문헌과 정책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부모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한 이론 연구로서, 실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분석 대상이 주로 국내 자료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권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부모교육을 적응 중심 지원에서 관계·권리 중심 교육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향후 실증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러한 논의가 확장·심화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기정(2009).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 41, 77 - 102.
- 강기정, 이윤주. (2010). 다문화가정 부부갈등의 원인과 조정 요인. **가족과 문화**, 22(2), 89 - 118.
- 강현옥, 황혜원. (2013). 다문화가정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 **가족치료연구**, 21(2), 101 - 129.
- 김미숙. (2020).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배제와 가족 기능. **가족복지연구**, 25(1), 55 - 80.
- 김연수. (2008).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와 적응. **가족과 문화**, 20(3), 1 - 25.
- 김영란, 이병인. (2012).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 문제와 갈등. **한국가족복지학**, 17(3), 65 - 92.
- 김정원, 남규. (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가족환경과 적응. **아동학회지**, 30(5), 89 - 108.
- 남정아, 양명숙. (2013).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적응과 가족지지. **상담학연구**, 14(4), 201 - 225.
- 민성혜, 김경은, 김리진. (2011). 다문화가정 부모교육의 효과성 분석. **사회복지연구**, 42(3), 55 - 83.
- 박선옥, 김하림, 최수현. (2010).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평생교육연구**, 16(4), 99 - 125.
- 서수미, 박혜원. (2016).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지원 요구. **아동복지연구**, 14(2), 41 - 68.
- 서지영. (2019). 다문화가정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 기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4(1), 45 - 70.
- 심규선. (2018). 다문화 사회통합과 문화다양성 인식. **한국사회학**, 52(2), 89 - 118.
- 이경숙. (2015). 다문화가정의 성역할 인식과 갈등. **여성학연구**, 25(3), 121 - 148.
- 이은경(2013).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가족관계. **한국사회복지학**, 65(4), 205 - 230.
- 이효정, 김정연, 박소영. (2020). 다문화가족 정책 수혜자의 인식 유형 분석. **사회복지정책**, 47(3), 29 - 56.
- 정기선, 김혜영. (2018). 다문화가정의 문화적 갈등과 동화 압력. **한국사회학**, 52(1), 45 - 74.
- 한경남. (2012). 다문화가정 부부의 갈등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질적연구**, 13(2), 33 - 61.
- 한서연. (2012). 다문화가정의 문화적 갈등과 가족 기능. **사회과학연구**, 28(1), 133 - 160.
- 현은애, 나종혜. (201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적응. **여성연구**, 22(1), 77 - 104.
- 국가인권위원회. (2017). 결혼이주민 대상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여성가족부. (2020).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인권침해 개선 방안. 세종: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평가 보고서. 세종: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2).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 현황. 세종: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3).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 - 2027). 세종: 여성가족부.
- 통계청. (2024).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 Banks, J. A.(2016). *Cultural diversity and education: Foundations, curriculum, and teaching* (6th ed.). New York: Routledge.
- OECD. (2020).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Paris: OECD Publishing.

Abstract

A Discussion on the Direction of Parent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Gender Equality Awareness-

Kim, Kyoung Mi*

This study aims to theoretically examine the structural context in which a lack of gender equality awareness in multicultural families leads to marital conflict, communication breakdown, and violations of human rights within the family. In addition, the study discusses directions for parent education to address these issues based on an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and policy materials.

The research is a literature- and policy-based theoretical study that analyzes domestic research published since 2015, as well as statistics and policy reports on multicultural families issued by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The analysis reveals that existing parent education progra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have largely focused on language acquisition and cultural adaptation, while educational interventions aimed at restructuring gender-unequal power relations and family dynamics have been insufficient.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that parent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be restructured as gender equality-centered education, with an emphasis on redefining gender roles and strengthening gender sensitivity and human rights awareness.

Keywords : multicultural families, gender equality awareness, gender sensitivity, human rights awareness, parent education

* Korea Welfare Cyber University, Dept. of Child and youth Welfare, Professor